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42호
[2022-16]
2022. 9. 14.

# ESG 경영 활성화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 과제


## 요약

- ESG 경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통한 사업 기회 확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 등이 관측되기 시작
  - ESG 관련 국내외 투자 규모가 증대되고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신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모든 국내 산업에서 기업의 ESG 등급과 수익성 간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소수 산업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ESG 경영을 통한 사업 기회 확장이 진행 중임을 시사
  - 국내 ESG 및 환경(E), 사회(S) 부문 세부 평가의 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국내 ESG 경영 확산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했음을 시사
- 국내 ESG 평가 중 환경(E) 부문에서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ESG 정책 수립 시 이를 완화할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ESG 등급이 높으나, 환경(E) 등급 세부 항목에서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평가가 높아 그린워싱 우려 존재
  - 그린워싱이 실재할 경우 ESG 경영의 양적 확대는 환경(E) 부문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 필요
- 능동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ESG 경영 활성화와 비경제적 정책목표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ESG 경영환경 조성 추진 필요
  - 양적 도입이나 선언보다 민간 주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ESG 정책을 강구할 필요
  - K-ESG 평가지표는 사회적 가치와 정책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민간 지표와 차별화하고 ESG 경영에 대한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평가지표와 공존 가능
  - 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실제 지속가능한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창출, 친환경 생산장비 구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금융지원 확대, ESG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간소한 공시기준 등 맞춤형 정책 필요

## ▣ 국내외 ESG 경영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활성화 촉진과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수립 필요성 확대

- 투자자의 인식과 관련 제도 변화로 국내외에서 ESG 경영[1]에 초점을 맞춘 투자 꾸준히 증가
  - 2006년 책임투자원칙이 성립된 이후 투자 결정 시 기업의 ESG 경영을 고려하는 투자기관이 증가 추세
  - 미국 밀레니얼 자산가 중 88%는 투자하는 기업의 ESG 성과를 중시[2]
  -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3]
  - 2025년 전 세계 ESG 관련 투자 규모는 53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4]
  - 한국에서도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ESG 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KOSPI 상장사까지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예정
  - 2022년 현재 국내 ESG 관련 펀드 규모는 약 1조 7,000억 원이며, 관련 채권시장 규모는 2조 1,500억 원으로 추정[5]
- 신정부가 국내외 ESG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ESG 금융 규모를 2030년까지 31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6]
  - ESG 경영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기존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목표와도 부합
  - 신정부는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민관합동 ESG 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
-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정책목표 달성, ESG 경영 확대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 현재 ESG 정책논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과 ESG가 추구하는 비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는 데 중점

1)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ESG 경영은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기업의 경영 방침임.
2) MSCI ESG Research LLC(2020), "Swipe to invest: the story behind millenials and ESG investing".
3) 이 외에도 세계 주요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
4) Bloomberg Intelligence(2021), "ESG assets may hit $53 trillion, a third of global AUM", Feb. 23.
5) KRX ESG포털, https://www.fundguide.net/hkcenter/esg(검색일: 2022. 5. 26)
6) 머니투데이(2022), "ESG 금융 규모 310조로 확대 추진, 민간합동기구도 신설", 4월 29일.

- ESG 경영 활성화 시 기존의 비경제적 분야 정책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가 기업활동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이는 ESG 경영 활성화와 기존의 다양한 정부 정책목표 간 부합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민간·정부의 역할 분담과 정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
- 또한 ESG 경영 확대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황 파악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강구 필요

## ▣ ESG 경영 확산이 국내 산업 전반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지는 못하나 일부 산업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가 관측됨.

●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ESG 경영역량 향상이 수익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SG 확대가 전반적 사업 기회 창출로 이어지지 못함을 시사

- ESG 경영 확산으로 인한 사업기회 창출 및 확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수익률과 ESG 등급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7)]
- 통합 ESG와 개별 E, S, G 등급이 1% 높은 기업은 자산수익률도 각각 0.041%포인트, 0.020%포인트, 0.035%포인트, 0.041%포인트 높은 것으로 관측(〈표 1〉 참조)
- 그러나 양자 간 상관관계는 기업 고유특성을 통제할 경우 모두 사라지며 이는 특정 기업의 ESG 경영역량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수준임을 의미
- 즉, ESG 경영 확산이 전반적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거나 ESG 경영 대응이 기업의 비용부담[8)]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음.

〈표 1〉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 실증분석 결과

| | ESG 등급 | E 등급 | S 등급 | G 등급 |
|---|---|---|---|---|
| 선형모형 | 0.041*** | 0.020*** | 0.035*** | 0.041*** |
| 기업고정효과 통제 | 0.011 | 0.010 | -0.0074 | 0.0040 |

자료: 김용·조재한(2022),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 ISSUE PAPER 2022-03, 산업연구원.
주: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통합 ESG, 개별 E, S, G등급은 S, A+, A, B+, B, C, D 7단계로 분류되며 실증분석을 위해 각 등급에 7, 6, 5, 4, 3, 2, 1점을 배정.
2) 선형모형을 활용한 기업 자산수익률 분석의 독립변수로 로그값을 취한 ESG 등급, 연도 더미변수, 산업 더미변수(KSIC9 중분류) 사용.
3)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한 분석에서 독립변수로 로그값을 취한 ESG 등급, 연도 더미변수 사용.
4) *, **, ***는 각각 신뢰수준 90%, 95%, 99%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7) 76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2020년 기간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과 KISVALUE의 재무자료를 통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
8)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추가 고용, ESG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정보취합 비용 등 발생 가능.

- ESG 경영역량 향상은 일부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나 다른 산업에서는 수익성을 낮추는 양면적인 결과를 산출함에 따라 ESG 경영 확대로 인한 기회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의복과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ESG 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이 0.15% 포인트 동반 상승하는 반면 종합 건설업 내 기업의 ESG 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14%포인트 하락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산업 내 기업의 E 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22% 포인트 동반 상승, 그러나 종합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내 기업의 E 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17%포인트 하락

〈그림 1〉 산업별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상관관계




자료: 김용·조재한(2022),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 ISSUE PAPER 2022-03, 산업연구원.
주: 1)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ESG, E, S, G에 관한 결과 표시.
2) 해당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자산수익률, 독립변수로는 로그값을 취한 ESG 등급, 연도 더미변수, 산업 더미변수와 로그값을 취한 ESG 등급 간의 교차변수, 기업고정효과를 포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주황색 막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하늘색 막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냄.

- 섬유제품 제조업 내 기업의 S 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11%포인트 동반 상승하나 출판업 내 기업의 S 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12%포인트 하락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내 기업의 G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18%포인트 동반 상승하는 반면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산업 내 기업의 G등급 1% 상승 시 자산수익률은 0.18%포인트 하락
- 특히 환경영역(E)에서 등급과 자산수익률 간 관계가 가장 상이하게 나타나는데[9] 이는 산업별 특징이 ESG 경영 대응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영역이 환경영역임을 의미

● 국내 ESG 경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ESG 경영을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 소수의 산업에서 ESG 경영역량 향상이 사업 기회로 이어지나, 일반적으로 ESG 경영과 수익성의 관계는 관측되지 않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 저하
- 즉, 기업이 ESG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가지려면 ESG 경영을 통해 사업 기회가 창출되거나 확장되는 경영환경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

## ▣ 기업의 ESG와 환경(E), 사회(S) 관련 세부 역량의 향상은 이자비용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ESG 경영 확산이 기업 금융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

● 기업의 통합 ESG 등급과 세부 E, S 등급 상승 시 기업 부채이자비용 감소가 관측됨.[10]

- ESG 경영 확산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ESG, E, S, G 등급과 타인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타인자본비용의 척도로 부채이자비용을 사용[11]
- 기업 내 통합 ESG, E, S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때 평균적으로 부채이자비용은 각각 0.13%포인트, 0.086%포인트, 0.063%포인트 감소(〈표 2〉 참조)
- 이는 기업 내에서 ESG, E, S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때 기업 이자비용이 각각 4억 2,510만 원, 2억 6,160만 원, 2억 601만 원 감소함을 의미(〈표 2〉 참조)
- 단, 부채이자비용과 ESG, E, S, G 등급 간의 상관관계는 산업별 상이성이 낮게 나타남.

9) 〈그림 1〉의 E, S, G 영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의 표준편차는 각각 0.07, 0.06, 0.057로 나타나 환경영역인 E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10) 부채이자비용이란 기업의 부채 대비 이자비용을 뜻하며 기업 금융비용의 주요 척도로 간주됨.
11) 김용·조재한(2022)의 실증분석에서 부채이자비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이자비용의 다른 결정요인인 자산수익률, 유동비율, 자산규모(로그값), 레버리지, 그리고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음. 김용·조재한(2022),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 ISSUE PAPER 2022-03, 산업연구원.

〈표 2〉 ESG 등급과 부채이자비용 실증분석 결과

| | ESG 등급 | E 등급 | S 등급 | G 등급 |
|---|---|---|---|---|
| 부채이자비용 (%포인트) | -0.13** | -0.086** | -0.063* | -0.011 |
| 등급 한 단계 상승 시 감소한 평균 이자비용 (만 원) | 42,510 | 26,160 | 20,601 | - |

자료: 김용·조재한(2022),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 ISSUE PAPER 2022-03, 산업연구원.
주: 1) ESG 등급과 기업 신인도 결정요인인 자산수익률, 유동비율, 자산규모, 레버리지, 연도 더미변수, 기업고정효과를 통제.
2) "감소된 평균 이자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ESG 등급에 대한 계수에 표본 평균 부채를 곱한 금액을 표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위주로 기술.
3) *, **, ***는 각각 신뢰수준 90%, 95%, 99%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ESG 등급 외에 기업 신인도(creditworthiness)의 주요 결정요인인 자산수익률, 자산규모, 레버리지에서도 부채이자비용과 유의한 관계 존재

●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ESG 경영과 부채이자비용 간 관계는 ESG 역량이 기업 신인도의 주요 결정요인이며 ESG 경영 확산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ESG, E, S 등급과 기업 부채이자비용 간 음의 상관관계는 ESG 경영역량이 상승할 경우 기업의 현재와 미래 부채 상환능력이 높아지리라는 기대를 반영
- 한편, ESG, E, S, G 등급과 부채이자비용 간의 관계가 산업별로 차이가 작다는 점은 ESG 경영 확산으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가 산업 전반의 현상임을 시사
- 즉, ESG, E, S 경영역량은 기업 신인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ESG 경영 확산은 산업 전반의 투자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해석 가능

## ▣ 국내 ESG 평가환경에서 ESG 워싱 문제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는 잠재적 우려 사항

●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용이해진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는 동시에 ESG 워싱 또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기업 최고경영자가 실제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12] 자신의 명성을 위해[13] ESG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ESG 경영이 본래 취지에 벗어나 실체 없는 광고 수단으로 오용되는 ESG 워싱 또는 그린워싱이 우려된다는 견해 존재

12) 이는 "대리인 문제"의 한 가지 예로서 대리인 문제란 특정 개인이 한 집단을 대리하여 해당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나 실제로는 집단과 개인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
13) Benabou, R. and J. Tirole(2010), "Individual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conometrica*, 77, pp. 1-19.

- ESG 경영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재무실적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나, ESG 경영 관련 정보 대부분이 정성적(qualitative)인 탓에 검증이 어려워 워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상존
- ESG 경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가 혼재하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별 분석 결과나 국내기업 대상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

● 실증분석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통합 ESG 및 사회(S) 등급이 높게 나타나나, 비효율적 자금 운용 기업의 환경(E) 등급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그린워싱 문제의 가능성 야기

- 비효율적 경영 기업의 ESG 경영평가가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국내 ESG 평가환경에 ESG 워싱, 그린워싱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14]
- 실증적 결과를 얻고자 해외기업 대상 선행연구를 기반으로[15] 국내 ESG, E, S, G 등급과 경영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영 효율성 척도로는 자금 활용 효율성을 사용[16]
- 실증분석 결과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 높은 통합 ESG와 S등급을 보여 통합 ESG와 사회(S) 영역에서의 워싱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표 3〉 참조).[17]
- 그 반면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의 E등급이 높게 나타나 국내 ESG 경영평가에 그린워싱 문제가 우려됨(〈표 3〉 참조).

〈표 3〉 ESG, E, S 등급 결정요인 분석 결과

| | ESG 등급 | E 등급 | S 등급 |
|---|---|---|---|
| 배당성향 | 1.10* | -1.64* | 1.33* |

자료: 김용·조재한(2022),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 ISSUE PAPER 2022-03, 산업연구원.
주: 1) 실증분석 시 총자산규모, 이자비율, 자산수익률, 유동비율, 토빈의 Q, 기업고정효과, 연도 더미변수를 통제하였고, 누락변수 편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의 배당성향 평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음.
2) *, **, ***는 각각 신뢰수준 90%, 95%, 99%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14) 대리인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기업일수록 내부자금이 많다는 경향성을 도출함.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고수익성 사업 투자, 투자자 배당, 금융비용 지급 등으로 내부자금이 적은 반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사적 편익을 위해 내부자금을 활용한다는 논리에 근거.
15) Ferrell, A., Liang H., and L. Renneboog(2016), "Socially Responsible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2(3), pp. 585-606.
16) 또한 대리인 문제의 척도로 배당성향, 레버리지, 현금보유율, 잉여현금흐름을 사용.
17) 배당성향은 매출 대비 보통주 배당금으로 표현되며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이 기업 내 내부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자금 활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

## ▣ 신정부가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산출하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

- ESG 경영을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정부의 기존 비경제적 정책목표와 연관되므로 민간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 추구 가능
  - 환경, 고용, 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시장주도 경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움 제공
  - 친환경 경영, 근로자 복지 향상, 공정거래, 협력사와 우호적 관계, 윤리경영 등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기존 정책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유사
  - 즉, ESG 경영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비경제적 정책목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
- 신정부에서 공표한 지속가능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SG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시장주도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표 4〉 참조)
  - ESG 경영이 사회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은 일정 부분 확보
  - 실증분석 결과, ESG 경영역량 강화가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금 조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 가능
  - 그러나 국내 다수의 산업에서 아직 ESG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유인과 ESG 경영 수요를 높이는 시장주도의 ESG 경영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
  - 즉, ESG 경영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ESG 경영이 사업성을 확대해가도록 시장주도의 지속가능한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필요

〈표 4〉 기업 ESG 경영 관련 신정부의 국정과제

| | 세부 국정과제 |
|---|---|
| 지속가능성장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br>*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 ESG 금융기반 마련 |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중견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 녹색산업·기술육성 |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단, 국내 ESG 경영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 선언과 도입 자체보다 ESG 경영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 세부 국정과제에 제시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이나 ESG 금융기반 마련은 기업의 ESG 경영 참여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표 4〉 참조)
  - 그러나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린워싱으로 인해 단순한 ESG 경영 활성화, 특히 환경 분야 ESG 도입 확대를 위한 직접 지원은 정책효과가 낮을 가능성
  - ESG 경영으로 창출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실질적 성과를 정책목표로 하되 ESG 경영 확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과정에서 시장주도의 ESG 경영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ESG 경영 활성화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ESG 경영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존 정책 검토 필요
  - 그러나 ESG 경영 중 일부 영역에서 재무실적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공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딜레마 존재
  -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역할 분담 필요

### ▣ ESG 경영정보 공시기준 수립이 긴요하며 정책지원을 위한 정부 ESG 평가 지표와 민간 ESG 지표 간의 역할 구분 필요

- 신정부의 지속가능성장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정보 취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시기준 표준화 정립과 이를 고도화하는 작업 필요
  - 현재 표준화된 ESG 경영정보 공시안이 부재하고 전 세계 600여 개 ESG 평가사별 기준이 상이한 탓으로 개별 기업의 정보 취합 부담이 높은 상황
  - 기업의 정보 취합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화된 ESG 경영정보 공시기준 정립 필요
  - 단, 공시기준 표준화 작업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공시기준 편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민간 시장참여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공시기준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ESG 워싱 및 그린워싱 우려가 있는 항목에 관한 연구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시기준 수립이 중요
- ESG 경영 확대 속 기업을 통한 비경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K-ESG 고도화 시 사회적

가치와 비경제적 정책목표를 동시에 강조할 필요

- 민간 ESG 경영평가는 투자자를 위한 평가이므로 상대적으로 재무실적 향상에 영향이 큰 요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영역 평가의 경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ESG 경영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 그 반면 ESG 경영영역 중 재무실적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어려운 항목[18]에 대해서는 K-ESG의 평가 가중치를 높여 국내기업 ESG 현황 파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정책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 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친환경 생산장비에 대한 투자세액 및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 국내외 제도적 변화에 따라 친환경 경영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환경 경영역량은 저조
  - 이자비용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 향상이 미래 재무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대변
  - 그러나 탄소 집약적인 한국 산업구조[19],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은 E 등급[20], 대리인 문제로 인한 그린워싱 우려가 큰 기업의 환경등급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국내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은 더 낮을 가능성 존재
  - 국내 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는 제도 변화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신정부가 제시한 녹색산업·기술육성을 통해 친환경 생산 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 확충 필요
  -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녹색산업·기술육성(〈표 4〉 참조)을 통해 국내기업의 친환경 경영역량 확충 시급
  - 친환경 생산장비와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친환경 생산 전환이 어려

18) 온실가스 배출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관심이 낮은 경향이 있음. 일례로 맥도날드의 경우 소고기 패티 조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음에도 이로 인한 수익이 변동하지 않자 MSCI가 오히려 환경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음. Bloomberg Intelligence(2021), "ESG assets may hit $53 trillion, a third of global AUM", Feb. 23 참조.
19) 이준(2022),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KIET 산업경제」, 2022. 2, 산업연구원.
20) 2020년 기준 E, S, G 중 S와 G의 평균등급은 B를 기록한 반면 E의 평균등급은 C에 근접. 김용·조재한(2022),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정책적 접근」, ISSUE PAPER 2022-03, 산업연구원 참조.

운 산업 내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혁신적인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금융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장 필요

##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지원, 산업 특성이 반영된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

- ESG 경영 확산으로 인한 투자환경과 제도적 변화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대응 필요성을 시사
  - ESG 경영 확산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대응 필요성 증대
  - ESG 경영 확산은 ESG 경영이 미숙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저하를 초래할 우려 확대
  - 신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ESG 종합 컨설팅, 중소·중견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정책을 제시
- 신정부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는 실질적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역량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K-ESG를 활용한 지원정책 정책 수립이 바람직
  - 중소·중견기업은 규모의 한계로 인해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높음.
  -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을 위해서는 신정부가 제시한 컨설팅 및 실사·진단 방안 외에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간소한 공시기준 정립이 필요
  -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향상이 재무실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산업을 대상으로 K-ESG를 활용한 수요 창출형 정책 실행 필요
  -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E) 부문에 대해 산업특징을 고려한 장비, 시설, 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의 ESG 역량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

**김용** 산업혁신정책실 | 부연구위원 | aykim89@kiet.re.kr | 044-287-3275
**조재한** 산업혁신정책실 | 연구위원 | jhcho@kiet.re.kr | 044-287-3158

KIET 산업연구원
발행처 산업연구원 | 발행인 주현 | 편집인 김인철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Fax. 044-287-3333 홈페이지 www.kiet.re.kr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